

## 재일조선인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통치와 반공화국책동의 산물

박 학 철

현시기 재일조선인문제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의 하나로 상정되고있다. 오늘 일본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당하고있으며 외국인으로서의 초보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있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고질화된 반공화국대결자세를 버리지 않고있으며 공화국의 존엄 높은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그 어떤 《인질》처럼 여기면서 그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날을 따라 더욱 로골화되는 일본반동들의 반총련책동은 우연적인 행위가 아니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부터 출발한 극단한 국수주의적민족배타정책의 직접적 결과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적대시적인 책동은 과거최악에 대한 그들의 립장과 태도, 나아가서는 반공화국책동의 집중적발현으로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것이다.

재일조선인문제는 우선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파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동포들로 말하면 일제시기 징병, 징용, 보국대로 끌려갔던 사람들이거나 그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해방전에 일본땅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으며 오늘도 민족적멸시를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하고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414페이지)

재일조선인의 경우 그들에게는 일반재일외국인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교포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자의에 따라 일본에 거주지를 선택하였거나 일정한 문건을 발급받고 일본에 려행하였다가 그대로 정착한 외국인이 아니며 또 제3국에서의 무력분쟁에 의해 피난처를 구하려 온 피난민도 아니라는것이다.

재일조선인들로 말하면 그 대부분이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통치과정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다.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과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을뿐 아니라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징용》, 《징병》 등의 이름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끌어갔다.

일제는 《조선인륙군지원병령》(1938년), 《국가총동원법》(1938년), 《국민직업능력 신고령》(1939년), 《조선로무협회》(1941년), 《징병제》의 실시(1944년) 등 각종 악법 및

기구들을 조작, 공포하여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았거나 일본 및 여러 지역의 중세기적인 고역장에,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어갔다.

일제는 1939년부터 자국의 독점기업들에 《조선인집단련행》을 허가하고 《기업신청》에 따라 《조선총독부》가 각 지방에 동원인원수를 할당하데 기초하여 헌병, 경찰이 직접 조선사람 《사냥》을 맡아하도록 하였다.

일제의 파썸적만행으로 하여 1938—1943년사이에만도 《지원병》으로 1만 7 664명, 1944—1945년 《학도병》으로 4 385명, 1939—1945년사이에는 《군속》으로 15만 4 186명이 강제련행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도발이후에만도 도합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일본 및 기타 지역으로 끌어갔다.

\* 《태평양전하종말기 조선의 치정》(일문) 65, 145페이지,  
《태평양전하의 조선 및 대만》(일문) 33페이지

이것은 당시 조선의 인구를 2 000만명이라고 볼 때 4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징집, 련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일본이 조선사람들을 일본으로 끌어간것은 비단 이 시기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도 일본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랍치해갔으며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도 많은 조선사람들을 일본으로 끌어갔다.

일제는 식민지통치시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끌어갔을뿐아니라 패망이후 그들을 자기 고향에 돌려보내지도 않았다.

일본반동들은 배편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재일조선인들의 귀향을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일본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 조선사람들이 미국과 내통》하였기때문이라는 등의 허황한 소문을 내돌리면서 그것을 탄압과 학살의 구실로 삼았다.

지어 일본반동들은 우끼시마마루사건과 같이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고향에 보내준다고 배에 태워가지고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침시킴으로써 그들모두를 야수적으로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재일조선인들은 한결같이 조국에로의 귀향을 열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수 없었으며 해방은 되었어도 근 60만명이나 일본에 남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일본에서 발행된 도서 《재일조선인 60만》(일문)에 의하면 1947년현재 등록된 재일조선인들의 수는 59만여명이였다.

력사적사실은 재일조선인문제가 지난날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산생된 문제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재일조선인문제는 또한 일본반동들이 국제법적요구에 배치되게 처리함으로써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한채로 남아있는 문제이다.

재일조선인문제는 그 발생의 력사적경위로 보나 주권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에 관한 문제라는 의미에서 보나 응당 국제법의 요구에 따라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문제이다. 특히 일본당국은 지난날 저들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죄행을 놓고보아도 재일조선인들을 마땅히 보호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민족적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해줄 법적, 도덕적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처음부터 재일조선인들을 적대시하면서 초보적인 인권보장대책조차 취하지 않았으며 《점령국통치》를 구실로 아무런 법적담보도 없이 미군정의 처리에 넘겨버렸을뿐아니라 그들의 합법적권리를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1951년 《대일단독강화조약》체결 이후 보다 더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일본반동들은 1952년 4월 법무성 민사국장의 이름으로 일본호적에 들어있지 않는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무국적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일본을 드나드는 외국인관리를 위해 1951년에 제정한 《입국관리령》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외국인등록법》을 조작하여 14살이상의 모든 재일조선인들에게 《외국인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그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과 징역형을 마구 들썩였다.

일본반동들은 이처럼 재일조선인들의 법적지위를 심히 유린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의 제반 사회적권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분야에서의 차별대우는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문제를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어는 1949년에 조선인학교가 대대적으로 폐쇄당함으로써 배움의 길이 막힌 재일조선인자녀들이 일본의 공립학교들에 쫓리게 되자 이러저러한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걸어 배척하였다.

《대일단독강화조약》체결직후 일본당국이 발표한 《조선인자녀들의 공립 소, 중학교 및 고등학교취학에 대하여》라는 《교육장통지》에서는 일본공립학교에 입학할 희망하는 조선인아동들에 대하여 《입학원서》와 함께 별도로 《서약서》라는것을 제출하게 하여 입학후 일본법률에 복종할것과 조선어, 조선력사, 조선지리 등 민족과목에 대한 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것은 본질상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조선사람들에게 실시하였던 《조선교육령》과 다름이 없는것이였다.

일본반동들은 1953년에 문부성 초등교육국장의 이름으로 하달한 《조선인의 의무교육학교취학에 대하여》에서도 《일본법률을 존중하는자》에 한한다는 정치적부대조항을 못박음으로써 재일조선인자녀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사실상 부정하였다.

이처럼 일본반동들이 재일조선인들에 대하여 극심한 민족차별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재일조선인문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및 국제법적문제로 번져졌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일본당국의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규탄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1955년에는 일본땅에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결성되었으며 1959년부터는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의 길이 열리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의 처지에 전혀 무관심하였으며 재일동포들의 합법적지위를 룡락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일본《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문제토의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문제를 쌍방간의 《관계정상화회담》에 끌어넣었으며 그것을 저들의 정치

적결탁을 위한 흥정물로 리용하였다.

때문에 《회담》에서는 재일조선인문제가 그 어느 의제보다도 더 차요시되었으며 많은 경우에 그것은 일본이 다른 문제를 결착짓기 위한 미끼로, 양보수단으로 되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에게 애당초 재일조선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결과 1965년 남조선-일본간의 《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되던 당시 《4대협정》의 하나로 《재일남조선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라는것이 발표되었으나 재일조선인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에서는 《다년간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남조선국민이 일본의 사회질서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하는것이 량국과 량국국민간의 우호관계증진에 기여한다.》는 전제밑에 5년으로 한정된 기간내에 영주신청서를 낸 《남조선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일본영주허가를 인정한다고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협정》은 《일본국의 사회질서하에서의 안정된 생활》이라는 조건부를 제시함으로써 재일조선인들에게 예속적이며 굴욕적인 운명을 강요하고있으며 영주권문제에 있어서도 《남조선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국한시킴으로써 절대다수의 재일조선동포들을 제외시키고있다.

당시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일본출판물까지도 《이 협정에 의해 얻어진것은 〈협정영주권〉이라는 종이 한장뿐이었다. 〈협정영주권〉을 얻었다고 하지만 지문채취의 의무는 변함없이 강요되었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재일조선인문제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하게 된것이 전적으로 일본반동들의 방해책동때문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재일조선인문제는 다음으로 현시기 일본반동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조선사람들에 대한 멸시의식과 적대감정을 일본사회에 부식시켜 사회적편견을 조장함으로써 더욱 첨예화되고있는 문제이다.

오늘 일본에서는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의식이 강하게 지배하고있으며 특히 조선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극도에 이르고있다.

여기서 한가지 부언할것은 일본이 다른 모든 민족에 대하여서도 배타적인 립장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일본에서 민족차별은 모든 타민족에게 가해지는 현상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이나 서방인들에 대해서는 차별정책을 실시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숭배하고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한 일본문제전문가는 《일본인에게 흥미있는것은 한편으로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멸시하면서도 서방에 대해서는 항상 존경심을 품고있는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왜 일본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에도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멸시의식에서 사로잡혀 그들을 차별하고있는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사회적멸시와 차별은 단순히 인간차별이 세습화되고 체질화된 일본사회의 구조적특성에서 오는것만이 아니다. 그 주되는 요인은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부활을 저들의 《리념적기초》로 내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책동하고있는 데 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명치유신 이후 해외침략의 길에 나선 첫날부터 국내인민들에게 민족적우월감과 타민족에 대한 열등의식을 고취하는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으며 조선민족에 대하여서는 그 강도를 더욱 높이었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인민을 노예화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국내인민들에게 야마또민족의 《우월성》과 조선민족의 《열등성》을 인식시켜야 함을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있었다.

조선민족은 아득한 고대시기부터 일본에 문명을 가져다주고 원시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였으며 인류문화사에 특기할 공헌을 한 우수한 민족이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일본은 조선의 문명에 대하여 찬탄과 공감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중세시기에 들어서서는 그를 정복할 야심 밑에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참패를 당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일본은 근대시기 다른 나라들보다 뒤늦게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것으로 하여 조성된 정치, 군사적취약성과 문화적열세감을 맹목적인 《천황》숭배와 중세기적인 사무라이기질로 메꾸려고 하였으며 그를 기초로 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의 길에 나섰던것이다.

지난 세기초 자본주의명줄을 이어나가는데서 《생명선》과 같은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면서 일본이 제일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것이 바로 조선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야마또민족의 《우월성》을 극구 찬양하는것이였다.

때문에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일제는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나라에서 감행된 일제의 《황민화》책동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였다.

이런데로부터 일본에서는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극단한 조선민족차별정책이 실시되고있으며 재일조선인들의 법적지위가 크게 위협당하고있다.

오늘 일본에서는 대낮에 조선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구타당하고 나 어린 녀학생들이 입고있는 조선치마저고리가 칼에 찢기우는것과 같은 무례하고 모욕적인 깡패행위가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또한 상공인들의 합법적인 기업활동이 억제당하고 조선학교에 계속 다니면 죽이겠다는 협박이 로골적으로 가해지고있으며 자유로운 조국방문의 길이 차단되고 지어는 총련단체들까지 강제수색과 압수, 폐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일본에서와 같이 다른 민족에 대한 이러한 흑심한 민족배타주의정책과 로골적인 테로행위가 감행되는 나라는 없다.

문제는 일본반동정부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눈을 감고 묵인하고있으며 오히려 그 앞장에 서고있는것이다.

1961년 7월 당시 문부상이였던 아라키는 《일본인은 아프리카토인이나 조선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스럽다.》고 췌쳤으며 이전 수상 요시다는 국회발언에서 재일조선인들을 《사자몸속의 벌레》라고 참을수 없는 모독까지 하면서 로골적인 적대감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망언들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심, 경멸감이 벌써 위험단계를 훨씬 벗어났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단한 차별과 적대의식이 명백한 도전적

인 이러한 망언들과 행위들에 대하여 언제든지 문제시하거나 책임추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의사》표명과 행동에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발언과 책동들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의식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조장시키고있다.

오늘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열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 몰아치고있으며 그속에서 《야스구니진자》참배소동과 침략력사의곡책동, 독도강탈책동 등이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다.

제반 사실은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재일조선인문제발생의 직접적장본인이며 그 책임은 철저히 일본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오늘까지도 재일조선인문제해결을 방해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공민들이며 그들에게는 우리 당과 공화국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고 조국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성원이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인민모두를 한품에 안고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참다운 어머니품이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차별이 없는것처럼 일본땅에서 살고있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우리 당과 조국의 관심과 사랑은 시종일관하다.

이러한 사랑과 믿음속에 오늘 재일조선동포들은 거치른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살면서도 외로움을 모르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만일 일본반동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무모한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수치스러운 파멸만이 차례질것이다.

실마리어 재일조선인문제, 상공인